

“시의원 윤리조례안 더 엄격해져야”

대구참여연대, 겸직금지·직업 등록 의무화 지적

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“대구시의회가 준비중인 ‘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’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대구참여연대는 “의원윤리조례를 살펴본 결과, 의원들의 윤리 실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”며 “의원의 겸직금지를 분명히 하고 본인 및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의 영리 및 비영리 관련 직업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참여연대는 또 “조례제정과 함께 시의원이 이를 위반할 때 심사 및 징계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‘의원윤리특

위’를 만들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구체화해 즉시 가동돼야한다”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“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‘의원윤리심사위’를 구성해 특정 사안의 경우 이를 조사해 관련 의결을 윤리특위에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”을 촉구했다.

대구시의회의 의원윤리조례는 13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.

김정혜기자

tolerance@kyongbuk.co.kr